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러한 낮은 수준에서 중앙재정의 규모가 고정되었는가를 좀더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役制의 성격이 하나의 설명이 될 것이며, 또 하나는 결국 중앙권력과 지방 재지권력 간의 균형·타협의 산물로서 ‘정액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때 양반과 지주제의 문제를 고찰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전체 재정시스템을 통해 순환하는 물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의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 전체 재정시스템을 포괄하는 수량적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의 ‘비정규적’ 재정의 존재로 인해서 추정이 쉽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물류의 규모를 추정하고 전체 재정시스템의 전체 물류 중에서 지방재정이 점하는 비중과 지방기관 간에 이동하는 물류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면, 이 책에서 구상하였던 전체 재정시스템의 순환상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존재양식을 통해서 전체 재정시스템의 이해에 도달한다는 문제제기는 참신한 것이지만, 과연 중앙재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만으로 전체 재정시스템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존 재정사 연구가 수입 측면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을 지니게 된 것도 지방재정을 통해서 전체 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평이 되고 말았지만, 이는 서두에서 다짐한 바와 같

이 이 책의 의의가 非常하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평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른 서평에서도 충분히 언급된 바와 같이 故 金玉根 교수의 『朝鮮王朝財政史研究』 이후 새로운 세대의 재정사 연구의 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이해를 위한 필독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江湖諸賢의 일독을 요청한다.

(김재호 전남대학교 교수)

박이택 지음

『한국통신산업에 있어서 지배구조와
고용구조: 1876-1945』

한국학술정보, 2008, vii+548쪽

I

본서는 개항기에서 식민지기에 걸친 한국 통신사업기구의 설립과 변천, 통신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해방 이후 한국 산업발전의 특징인 국가주도 산업화의 역사적 전제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의의는 격변의 시대이었기에 동일한 계열의 자료수집이 곤란한 개항기, 보호국기, 식민지기의 변화를 일관된 체계에 의거한 분석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식민지기에 대해서는 통신산업의 변화를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주도 산업이라는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도 고려하여 3·1운동까지의 1910년대, 1920-1930년대, 전시기를 구분하여 연속하는 면과 변화하는 면을 상호연관지어 분석한 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본서가 해방 이후 한국 산업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면서도 그 역사적 전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연구 상황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일본과 대만의 본격적인 비교를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세 지역의 통신사업이 비교가능하도록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II

본서는 근대한국 통신사업의 산업조직, 생성과 성장, 내부조직에 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분석내용을 각 장의 소절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근대적 통신기관의 도입과 전개’에서는 통신사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업권의 소유구조 및 통신기관의 보급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대한제국기의 통신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개인의 영업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독점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채 독점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한편, 보호국기와 식민지기에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독점이 명시되어 이것이 영업자유에 예외임을 선언하였다. 통신기관의 보급은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청국 기관에 의해 운영된 西路電線(인천-한성-평양

-의주), 일본의 영향으로 가설하게 된 南路電線(한성-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교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었다. 또한 보급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총독부는 통신기관의 설립비용과 유지비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제도로써 청원통신시설제도와 전신전화 기부금제도를 실시하였다. 통신기관의 운영은 일본에서는 지역유지가 부업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본인 우편소장 또는 일본인 고원 등 외래자가 주업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는 조선의 통신기관이 일본과 비교하여 높은 운영비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신기관의 보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통신기관의 보급은 대만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통신사용량의 추이’에서는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급의 양과 질의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이용자수의 변화, 그리고 지역별 사용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편업무는 철도부설을 비롯한 운송수단의 개선에 힘입어 운송시간을 절약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전신업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교환체계의 개선 및 회선절약을 실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통신이용자는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잉여가 재정수입으로 흡수되어 가격면에서는 혜택을 얻지 못하였으나 품질개선이 라는 면에서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통신이용자의 증가는 대리변수를 통해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까지는 농업종사자,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는 상공인, 1930년대 중·후반은 상공인, 화이트칼라, 관공리에 의해 각각 주도되었다. 조선의 통신이용자 증가 추세는

1930년대에 대만을 추월하였지만 식민지기 전체에 걸쳐 일본의 메이지시대를 추월하지는 못하였다. 조선과 일본 간의 통신량 비중이 큰 관계로 일본인의 통신사용량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조선인을 능가하였지만, 조선 내부의 통신망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인의 통신량도 빠르게 늘어났다.

제3장 ‘인사관리체계와 고용구조’에서는 대한제국기 인사관리체계의 특징, 이 체계가 보호국기와 식민지기에 일본에 의해 구축되어 가는 과정, 식민지기 인사관리체계의 생성과정 및 변질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조선시대 정부기관의 기본 운영방식인 身分身役制에 의해 기술관료층은 형성되지 않았고 기술보유자도 천시되었다. 개항기 관료제의 목표가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으로의 변화에 힘입어 통신기관에서도 새로운 기술관료층이 형성되었다. 통신기관 종사자의 양성체제와 내부승진체제도 발전하여 관리의 채용은 양성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진의 경우 상급관리는 하급관리로부터 임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신분이 다른 노무자(傭人)는 관리로 승진할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식민지기 고용구조와 인사관리체계는 일본 통신기관의 영향을 받은 ‘現業中心主義’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식민지 초기의 인사관리체계는 학력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현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인사관리가 중요시되면서 신분간의 통합이 미진하지만 진행되었다. 식민지기에 통신기관의 양성체제는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직인 普通吏員과 中堅吏員의 양성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또한 현업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현업자의 작업환경 및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조치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식민지기 통신기관의 인사관리체계의 기반을 이루었던 현업중심주의는 조선인의 생산성 향상을 자극하였지만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노동시장 조건과 더불어 현업자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하여 차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경영진은 차별을 완화시키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III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자료상황에도 불구하고 격변기를 일관된 체계에 의거하여 분석한 본서는 근대 한국의 경제사, 산업사, 고용사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음에 틀림없으나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하여 평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기관과 관업기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기관 업무의 기본적인 성격은 관리이고, 관업기업 업무의 기본적인 성격은 독점적 사업을 운영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본서의 분석대상인 통신사업은 현재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해방 이후 한국 산업발전의 원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Amsden(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이근달 역, 『다음 아시아의 거인』, 시사영어사, 1990))과 더불어 해방 이후 한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정부와 민

간기업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 정부의 관영기업의 운영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업중심주의에 의해 신분 간 통합이 진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판단된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통신사업분야에서 1930년대 후반 特務雇員制度라는 잠정조치를 통해 현업종사자인 傭人の 대부분을 관리직인 관임관으로 승격시킨 사례가 있는 반면, 조선의 통신사업분야에서는 용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傭人 取締를 하급관리인 雇員으로 승격한 사례만을 가지고는 과도한 평가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 고용사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관리직과 현장업무자의 신분 간 통합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전시경제체제하에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실현을 위해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두 신분 간의 조직적 통합이 이루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순환과 직무급은 상호보완하는 내용은 아니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관리양성의 기본 이념이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官吏와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는 吏胥(이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점은 각 직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직무급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연구가 직무순환에 기초하여 능력이 다른 각 노동자에게 복수의 직무, 즉 업무(task)를 부여하는 일본 및 한국의 인사관리체계와 난이도가 다른 각 직무(job)에 노동자를 배치하는 미국의 인사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

李大根 著

『現代韓國經濟論』

한울, 2008, 560쪽

이 책은 ‘激變期’라고 불릴 1945년부터 최근까지 60년 이상에 걸친 기간의 한국 경제의 변동과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기간에 한국 사회가 겪은 인구변동, 전쟁, 귀속재산 관리, 대외정책(한일국교 정상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등 과장이 컸던 사건과 그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모은 연구서이다. 序章과 補論을 포함하여 3部 15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序章은 ‘戰後 世界經濟 再編과 韓國經濟’로서 世界經濟가 IMF/GATT체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이에 포섭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 경제가 美軍政의 정책, 韓國戰爭과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국내 分業構造의 파괴, 戰後 복구과정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援助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植民地經濟體制에서 世界資本主義體制로 편입되는 과정을 다룬다.

제1부는 ‘8·15해방—美軍政期の 經濟’로서 ‘해방 前·後期の 人口動態’, ‘해방 직후 産業勞動力의 존재조건’, ‘美軍政期